

윤 대통령 “수해지역 재난지역 선포·가용 자원 총동원”

“이권 카르텔 폐지해 복구에 투입” “재난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관계 기관에는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형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뒤어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 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으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험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인재(人災)’ 측면이 있는 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차원 물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있는 지방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권영준 후보자 부적합 의견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

는 우려를 담은 소수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 경과보고에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서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을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선언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北 핵사용 엄두 못내도록 한미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참석 전 회의를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고 이도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CG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르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홍준표 골프’ 진상조사 지시...당 감사·윤리위 제소 가능성

당 안팎 비난 여론 고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18일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광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홍 시장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도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에 비해 (더)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습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